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2015. 8. 04.(화) 조간(온라인 8. 03.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8. 03.(월) 09:00	총 7쪽(붙임 5쪽 포함)	
담당부서	정보화정책 (070-7797-2583)	작 성 자	손영준 (010-8677-9515)

## 공공정보화 사업공고 문제점 투성이

- 관련 지침 안 지킨 문서로 버젓이 발주 -

□ 그 동안 공공 SW구축사업시 연말을 사업종료기간으로 못박고 역으로 사업기간을 계산하여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7월 1달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제안요청서 (RFP) 223건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엉터리 문서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겉도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해당고시는 2015년 6월 17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4조의2(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한 산정서 공개율은 7% 밖에 안되며, 시행 1년이 상 지난 지금도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미준수율이 17%에 달하고 있으며, 비공개율이 무려 76%를 보이고 있다.
- 특히 금번 메르스사태로 인하여 추진되는 질병관리본부의 20억 규모의 사업에서조차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비공개로 사업공고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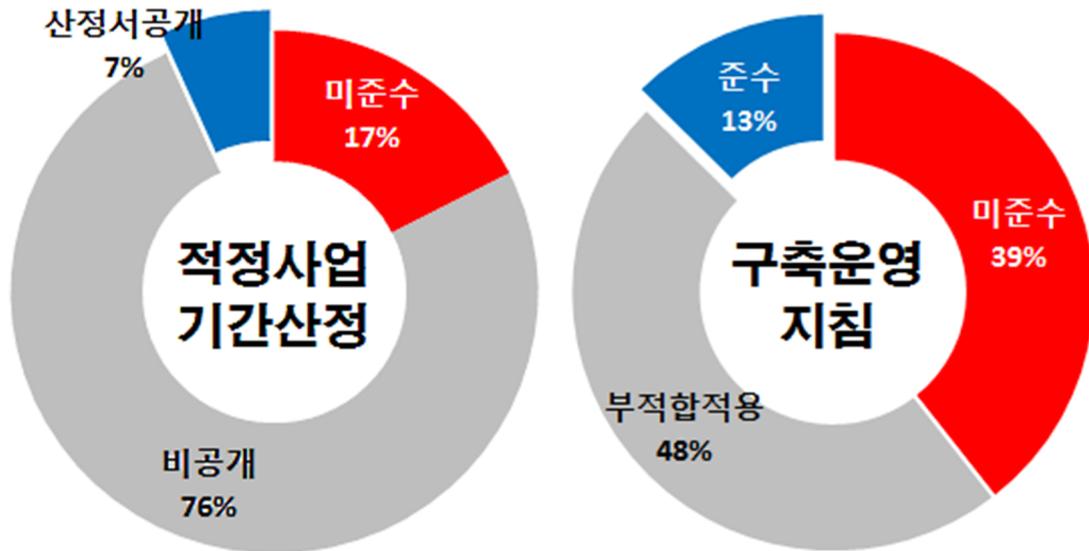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준수율 또한 엉망

- 해당고시는 2014년 11월 25일 개정되어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시 준수율이 13%이며, 과거 지침을 명시한 비율은 48%에 달하며, 미준수율은 39%를 보이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에 아직도 “행정자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정보 사회의 기본이다.

부"를 "안전행정부"로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조달청 또한 발주기관이 제출한 문서의 검증 없이 공고하여 계약진행을 수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이는 일 안 하는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볼 수 있다.



-끝-

□ 붙임

1. 적정사업기간의 중요성.
2. 정보화사업 관련규정 준수 실태조사 결과
3. 관련 규정

## 붙임 1

### 적정사업기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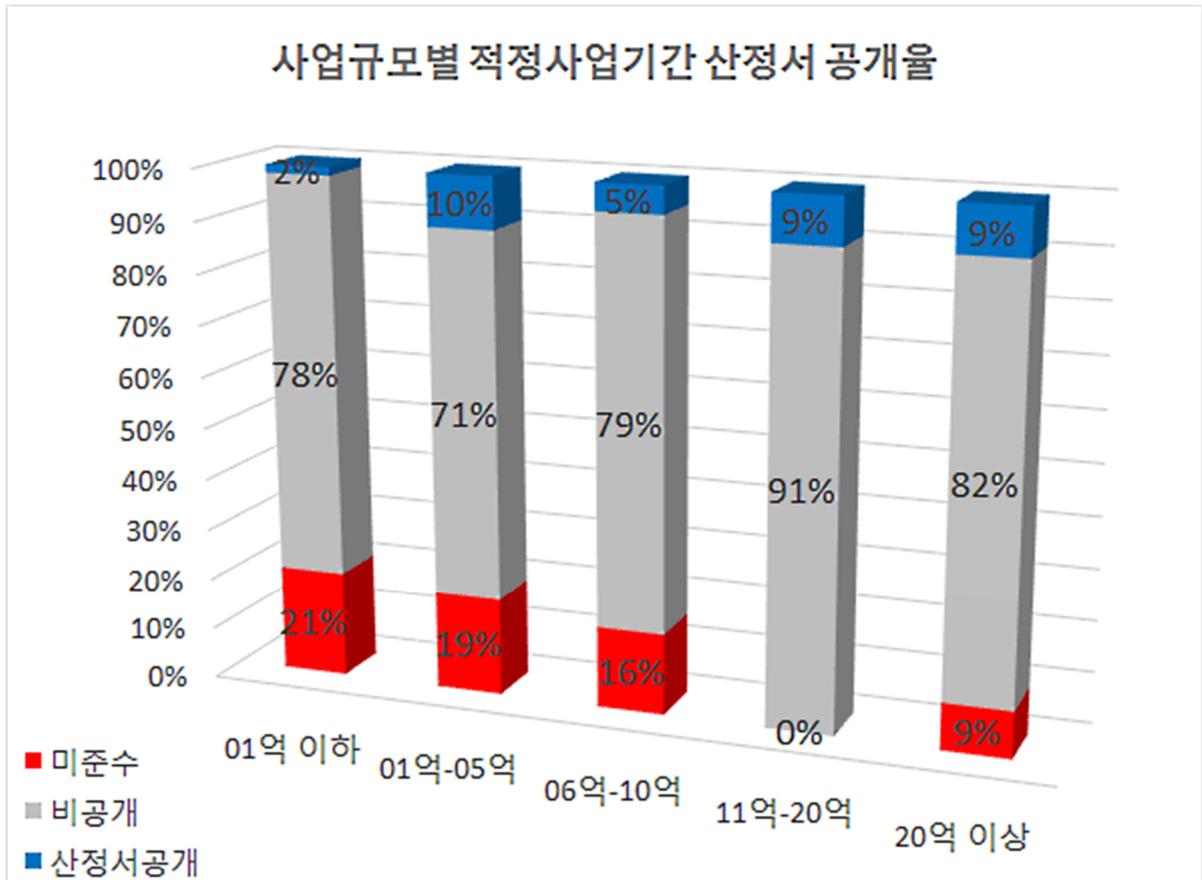
- 공공 SW구축사업시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한 문제점의 언급을 통하여 관련 제도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의 제4조의2(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 단지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처가 “적정사업기간산정”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금번 개정으로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실에서는 해당제도가 제 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짧은 사업기간사업에 따른 문제점.
  - 1차적으로 사업기간내의 종료를 목표로 하다 보니 일정에 쫓기어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월화수목금금금)에 노출되고 있다.
  - 무리한 일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그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분으로 보완사업을 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또한 상당수의 사업은 서류상으론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실질적으론 사업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주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 사업종료기간이 12월로 종료되는 관계로 차기 년도 사업이 나오는 빨라야 4월까지의 기업들은 “보릿고개”를 맞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그럼에도 수주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마저 못하면 기업의 경영자체가 어려워져 “울며겨자먹”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정부는 소프트웨어제값주기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통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 붙임 2

# 정보화사업 관련규정 준수 실태조사 결과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후 1개월간 준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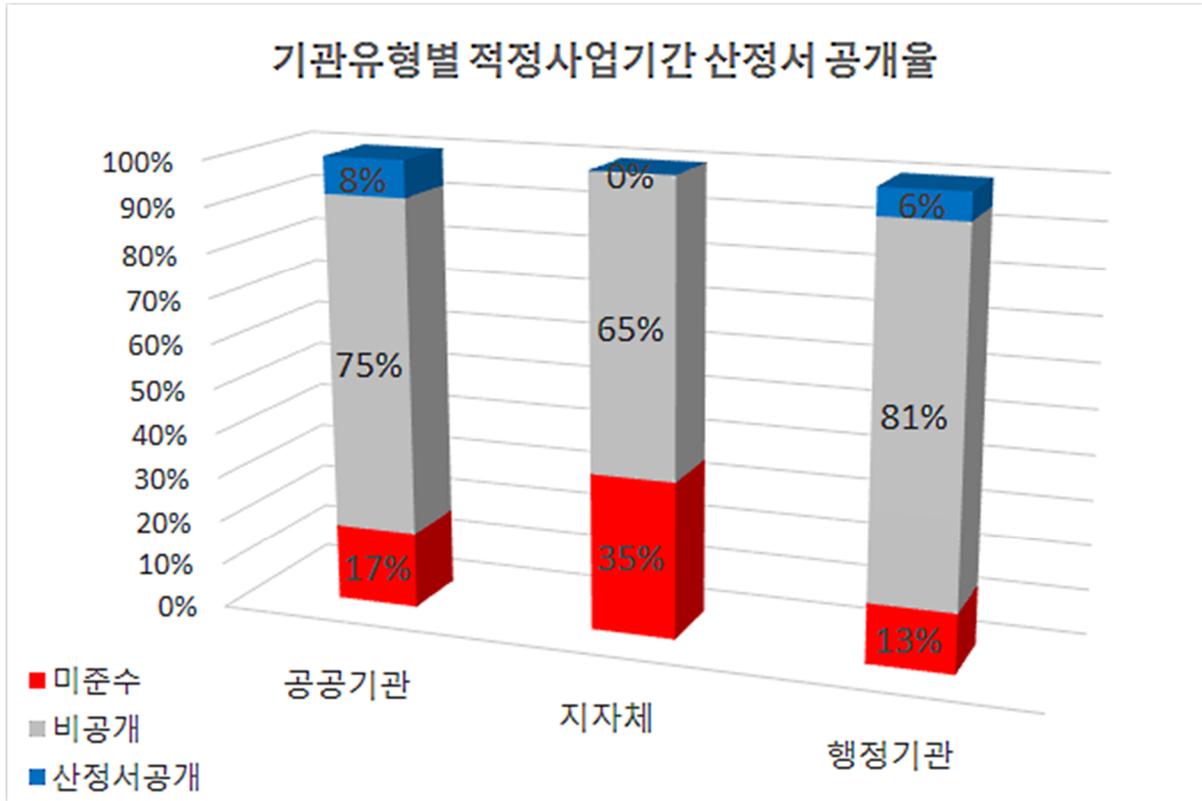
-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현실적인 문제로 준수율이 미미한 것은 납득이 가나 10억이상의 사업에서조차 평균 공개율이 9%에 그치고 있어 발주기관이 공공정보화사업의 정상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림 1. 사업규모별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공개율>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정보 사회의 기본이다.

- 기관유형별 분석 결과는 행정기관이 8%, 공공기관은 6%, 지자체는 0% 단 한곳도 산정서를 공개한 사업이 없다, 미 준수율은 행정기관이 13%, 공공기관은 17%, 지자체는 무려 35%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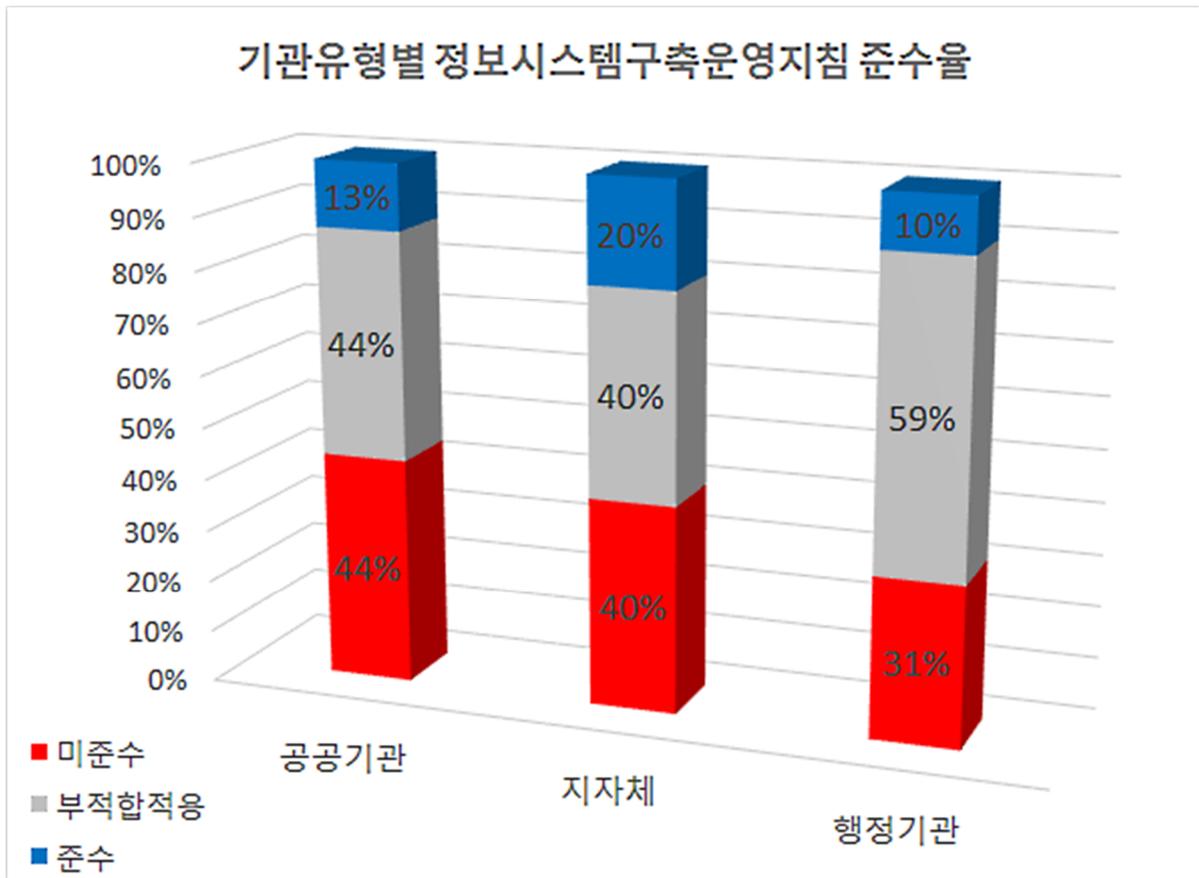


<그림 2. 기관유형별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공개율>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정보 사회의 기본이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준수율 또한 엉망.

○ 기관유형별 미준수율은 행정기관(44%), 지자체(40%), 공공기관(31%)로 평균 39%에 달하며, 과거 지침(안전행정부 지침)을 명시한 비율은 행정기관(44%), 지자체(40%), 공공기관(59%)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발주기관이 관련 제도의 파악 없이 과거 발주에 사용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업내용만 변경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는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공직사회를 무책임의 단면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 기관유형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준수율 >

## 붙임 3

## 관련 규정

별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